

## 4 종합

# ‘AI 활용 교육 가이드’ 배포

## 3가지 유형의 활용 수준 제안

## 강의계획서 기입 여부는 논의중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다음 학기부터 교수와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는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가이드라인은 교수학습개발원이 개발한 것으로, 수업 현장에서 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수업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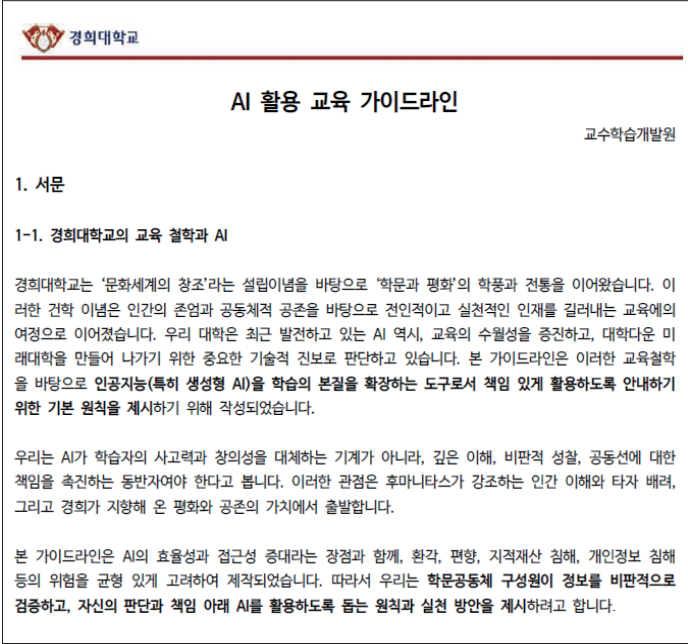
기존 우리학교는 ‘ChatGPT 가이드라인(2023년 8월)’을 제공했지만, 이 역시 ChatGPT 소개와 기초적인 윤리 수칙 제시에 머무르며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용 범위를 인공지능 전반으로 확대했고, AI 활용 6대 기본원칙을 정하고 위험도 분류 체계와 대상별 상세 가이드를 구체화해 업데이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매뉴얼은 교수학습개발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내 ‘연구&출판’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I 활용 6대 기본원칙은 ▲인간 중심의 학습주권 확립 ▲공존·상생과 공공성 강화 ▲정직·투명·책임 준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함양 ▲글로벌 시민성과 평화의 가치 확장이다. 또한 AI 활용 위험도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저위험’은 아이디어 발상, 개념 설명 문장 윤문 등 학습 보조 역할이며, ‘중위험’은 요약, 번역, 코드 디버깅, 에세이 초안 작성 등 결과물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경우다. ‘고위험’은 AI로 생성한 보고서, 에세이, 코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사례로 분류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수자는 수업 목적에 따라 AI 활용 수준을 ▲금지형 ▲제한 허용형 ▲적극 통합형 중 하나로 결정해 강의계획서에 참고할 수 있다. ‘금지형’ 수업에서 AI 활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한 허용형’ 수업은 교수자가 특정 주차나 활동에서 AI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6대 기본원칙을 정해 위험도 분류 체계와 상세 가이드를 구체화했다. (사진=〈AI활용 교육 가이드라인〉 캡처본)

‘적극 통합형’ 수업은 모든 학습활동에서 AI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AI 활용 역량 자체를 학습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다.

AI 활용 여부 자체를 교수자가 표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앙대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과반수 이상의 강의가 이를 공시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원 지상현 원장은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니라 교수자가 수업 운영 방향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며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허용 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은 학사지원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습자는 AI 활용 시 ▲도구명 및 버전 ▲사용 목적 ▲프롬프트 기록 ▲활용 방식 ▲결과 검증 과정 등을 기록해 둘 것을 권장한다. 제한 허용형 수업에서는 AI가 최종 산출물을 대체할 수 없으며 위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 통합형 수업에서도 AI 사용 기록과 함께 비판적 검증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I 활용 여부를 판별하는 공식적인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교수학습개발원은 AI 활용 여부 판단 시스템

인 턴잇인을 사용해 학위 논문을 판별한다. 그러나 일반 과제물 AI 활용 여부 판단의 경우는 별도의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지 원장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자와 학생이 상호 공유를 통해 평가와 채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부정 사용 판정은 기존처럼 정황, 사용기록, 학생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지 원장은 “보고서의 참고 문헌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참고문헌을 AI가 창조해 내는 경우처럼 구체적 근거를 통해 부정 사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필 시험의 경우 별도 공지가 없더라도 AI 활용은 금지된다”며 “마치 오픈북 시험이 금지되지 않은 수업에서 당연히 교재나 강의 노트를 보면 안 된다는 원칙과 마찬가지로”이라 덧붙였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최승은(사회학 2025) 학생은 “AI 활용 기록을 남겨야 해 번거롭겠지만, 무분별한 AI 사용을 막고 학습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 다전공 의무화 대안으로

## 거론된 온라인 강의 확대

##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다전공 의무화를 앞두고 학교 측은 온라인 강의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하이브리드 수업) 확대를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온라인 강의는 인프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지만,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신중론을 펼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오는 1학기부터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다전공 이수를 의무화하는 학사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강의 수요 증가와 교육 인프라 부담은 예상되는 결과이기에 강의 수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박하일 신임 기획조정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수 총원과 함께 “강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무처 역시 온라인 강의 확대를 인프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김성수 교무처장은 “초기에는 온라인 강화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되, 향후 하이브리드 강화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 ‘경희 교육 혁신 비전 선포’에서도 김진상 총장은 인기 학과 쏠림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오프라인 혼합수업과 온라인 강의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수업 현장에서는 온라인 강의 확대가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형 온라인 강의 ‘비만의 사회학’을 운영하는 박승준(약리학) 교수는 “온라인 강의 확대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교육의 질을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 수를 늘리는 방식에 앞서 교육 목표에 맞는 수업 설계와 평가 체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온라인 강의를 학점 취득 수단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에서 학습 몰입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전공 강의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필수 교양 과목인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을 담당하는 이석근(분자생물학) 교수 역시 한계를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빅문 수업은 교양 과목으로서 통합적 사고를 목표로 하지만, 전공 과목은 단계적인 지식 축적과 학습 깊이가 중요하다”며 “교양 과목의 운영 방식을 전공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사전 학습과 오프라인 수업의 결합은 전공 수업에서도 참고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전공 특성에 맞는 난이도 조절, 실험·실습이나 심화 토론과의 연계 등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양은진(회계세무학 2025) 씨는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실시간 수업에 비해 몰입도가 떨어지고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온라인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불안도 컸다”고 말했다. 특히 “실시간 줌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혼란이 발생해 성적에 대한 불안이 컸다”며 “다전공 제도 하에서 대형 온라인 강의가 늘어난다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훈(정치외교학 2023) 씨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수강이 편리했다”며 “과제를 통한 질의응답 구조도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형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57대 국제캠 총장은 공약으로 하이브리드 수업 확대를 내걸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대해 박병준(국제학 2017) 국제캠 전 총학생회장은 이를 다전공 필수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전 총학생회장은 “이 배경에는 다전공 필수화보다는, 일부 학과에서 구조적으로 수강 자체가 어렵거나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학생회장은 “다전공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교원 확충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하이브리드 수업은 어디까지나 보완 수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